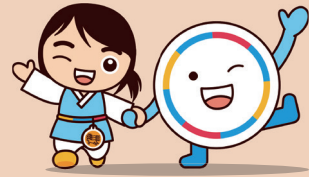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03-08
ISSN 2005-8535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ACRC NEWSLETTER 2023
Vol. 78
AUTUMN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국민권익

복잡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누구나 손쉽게





발행일 2023년 10월 27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김홍일

편집인 임규홍

정부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www.acrc.go.kr

blog.naver.com/loveacrc

twitter.com/loveacrc

www.facebook.com/loveacrc

www.instagram.com/acrc0229

유익한 권익

- 04 권익 현장
- 7년간 지연된 '영주다목적댐' 준공,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태안군민 1/3이 요청한 집단 고충민원 조정

- 10 정책 공작소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 활용하기

- 16 빅데이터窓
- 2023년 9월 국민의 목소리



- 20 친절한 권익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 22 권익 키워드
- 9월의 관심키워드: 지역축제

- 24 ACRC 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30일부터 시행 외

생활속 권익

- 28 고충 해결소
- 놓치기 쉬운
국민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다



- 32 알려드립니다
- 사각지대 없앤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 34 카툰
-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공감의 권익

- 36 사람과 공감
- ChatGPT 이후 새로운 세상
세종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수진 교수



- 40 찰나의 순간
- 수려해서 가을에 더 아름다운
충남 부여

- 46 휴먼+트렌드
- 기업의 경영 목표가 바뀐다, ESG경영

- 50 찾아가는 권익
- 열 달 동안 Mom 편한 날을 위한 실천

- 52 이야기가 있는 레시피
- 당신의 심장은 안녕한가요?
심혈관질환을 지켜줄 튼튼한 습관

- 56 독자의 소리
- 퀴즈 당첨자

7년간 지연된 ‘영주다목적댐’ 준공,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수변 관광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착공해 2016년 공사를 완료한 영주 다목적댐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이뤄냈다. 그동안 영주시는 문화재 이전·복원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댐 준공이 보류되어 7년 동안 영주시의 후속 숙원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댐 주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지사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재 이전·복원사업비를 정산해 댐을 준공하도록 조정했다. 이로써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으로 7년간 지체된 영주다목적댐 준공이 가능해져 앞으로 댐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이상 기후에 대비한 홍수 피해 경감 등을 위해 낙동강~내성천 하류 56km 상류 지점에 영주다목적댐을 2009년 착공해 2016년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부속사업인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이 지연되면서 7년간 댐 준공에 차질을 빚어왔다.



댐 준공이 장기간 보류되면서 수변 관광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댐 주변 개발과 관련된 영주시의 8개 후속 숙원사업(사업비 3,809억 원) 추진이 어려워지자 영주시 주민 33,434명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이뤄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비용을 정산하고 후속 행정지원 업무를 영주시에 이관하기로 했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댐 건설사업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문화재 이전·복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와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안이 시행되면 영주시는 댐 준공 승인에 따라

복합 관광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장기간 지연된 댐 사업 준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거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선거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선거관리위원회의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불공정하게 이뤄진
312건의 채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하고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당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선거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거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거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거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했지만 중앙선거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불성실하게 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거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적발됐다. 특혜성 채용에는,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거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거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거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응시자격 기준을 선거위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거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했으며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2013년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으며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선거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거위의 자의적인 채용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거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거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민 1/3이 요청한 집단 고충민원 조정

태안 안흥진성 50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

197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 보호용 철조망에 갇혀 있던 태안군 안흥진성이 50년 만에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출입이 불가능했던 태안 안흥진성의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1일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사무소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태안군민 19,544명이 제기한 안흥진성 정비 및 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안흥진성은 발굴과 복원을 거쳐 2026년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흥진성은 서해안 방어를 위한 요충지로서 선조 16년(1583년)에 지어진 성벽 높이 3.5m, 둘레 1,717m 규모의 석성으로, 2020년 11월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가 1976년 1월 문을 열고 이곳에 보호용 철조망이 설치돼 안흥진성의 45.3%에 해당하는 777m 구간의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이후 1989년 12월에 보호구역으로, 2022년 8월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서 성벽이 무너지거나 붕괴 직전의 상태에 이르러도 복원·정비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다. 이에 태안군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544명은 지난 3월 ‘안흥진성을 발굴하고 복원해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보호구

역을 해제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즉시 김태규 부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년까지 개방 범위를 정해 발굴 및 복원하고, 안흥진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나머지 부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청은 태안군이 빠른 시일에 안흥진성을 발굴 및 복원 등 정비가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태안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원만한 무기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안흥진성을 성공적으로 정비해 조속히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안흥진성은 과거의 국방을, 안흥센터는 현재의 K-방산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안흥진성을 조속히 복원하고 개방해 관광 활성화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 활용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들이 2년 동안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도의 활용, 자문변호사의 업무와 대리신고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한다.

01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신고자가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하는 제도

대리신고 범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이하 '청탁신고'), 부패행위 신고(이하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이하 '행동강령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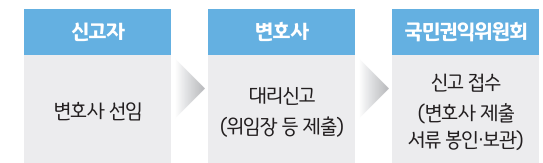
신고기관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자료 봉인 및 보관 의무를 부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

신고방법

- **변호사**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및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비실명 대리신고서에는 대리인인 변호사의 인적사항만 기재(실명(기명) 신고서에는 신고자 및 대리인(선임한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
- **국민권익위원회**
제출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 등은 봉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관
봉인·보관하는 자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변호사의 대리행위 범위

- 신고자와 위임계약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 (위임 범위에 따라 신고서, 증거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신고서 제출 이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등도 대리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의 경우 업무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내부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의 사건 처리

-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서에 변호사의 인적사항만 기재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첩·송부 시 변호사의 인적사항만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
-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 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송부하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는 이첩·송부 대상에서 제외

02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0명이며 활동 기간은 2년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
-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내부 신고자에 대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가능
- 신고자로부터 상담 메일 등을 받았을 경우 내부 신고자 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제도 취지상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로 신청권자를 한정.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내부 신고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

자문변호사 업무 범위

- 공익신고, 청탁신고, 부패신고, 행동강령 신고 관련 법률상담
- 대리신고 시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포함)하는 추가 자료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

법률상담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증거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 상담
- 법률검토 후 공익신고, 청탁신고, 부패신고, 행동강령 신고 해당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단,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회신, 기한 내 검토 어려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다른 자문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 상담 신청 내용이 공익신고·청탁신고·부패신고·행동강령 신고 중 어느 신고와도 관련 없는 경우 상담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 경우 사유를 상담요청자에게 설명)

대리신고

- 상담 결과 대리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와 협의해 대리신고 진행
- 대리신고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 작성
- 비실명 대리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팩스 접수 불가)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접속해 신고
- 오프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행위 유형별 정의 및 예시

공익침해행위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 (정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471개 대상법률의 별칭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예시) 유통기한 변조 식품 판매(식품위생법),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 (근거) 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제8조 • (정의) ① (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금품 등 수수)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예시) ① (부정청탁) 공직자등의 인사(채용, 승진, 전보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 ② (금품 등 수수)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이 각출하여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패행위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정의) ㉞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권한남용, 법령위반을 통한 사익 도모행위, ㉟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㊱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나목, 다목은 행위주체가 공직자에 한정되지 않음) • (예시) ㉞ 공직자가 지인에게 공공계약을 몰아주는 행위, ㉟ 정보부조금 부정수급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등 • (정의) 공직자 행동강령(공무원 행동강령·기관별 행동강령 등)상 행위기준을 위반한 행위 • (예시)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게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사립학교(법인포함)·언론사 임직원

• (부패행위 적용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사립학교(법인포함) 임직원

•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용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등, 부패행위 적용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용 대상 공직자 개념에 각기 차이가 있는 점에 유의(위 표 참조)

※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 유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유형별 구체적인 신고사례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신고하기 → 신고맞춤사례에서 확인 가능

03 자문변호사의 안내 및 통지 의무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신청 절차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 단, 각 법률마다 규정된 보호·보상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참고
- 대리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신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

신고자에 대한 통지 의무

- 자문변호사는 「운영규정」 제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각 호의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운영규정」

제6조(법률상담 등)

⑤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리신고를 한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위원회가 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자문변호사에게 통지한 경우
3. 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보완 사항 제출에 대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위원회가 대리 신고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사·수사 등 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04 자문변호사 대리신고 프로세스 및 상담 전 확인 사항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단계



★ 법률상담 진행 전 필수 확인사항

- ① 내부 신고자 해당 여부
 - ② 다른 자문변호사에게 동일한 상담을 신청했는지 여부
- ※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상담 진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상담 종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단계



신고 처리결과 통보 단계



빅데이터로 확인하는 2023년 9월 국민의 목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s://bigdata.epeople.go.kr/bigdata/bigMainPage.npaid>)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기관별, 성별, 연령별 민원 통계와

급상승하는 민원 키워드 등의

민원 빅데이터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주·월간 민원 동향 등 권익위원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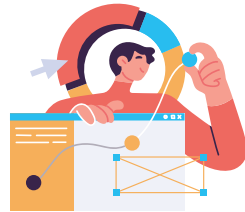
분석한 각종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이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하고

기획재정부는 크게 감소했다.

1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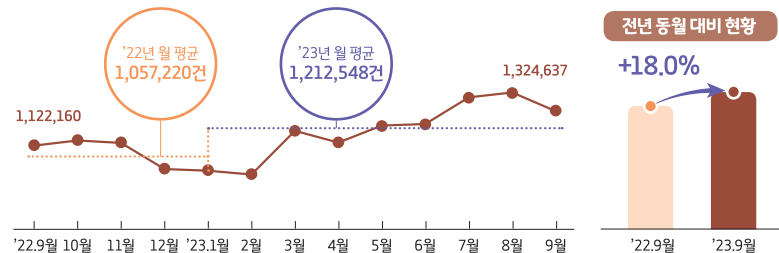


▶ 2023년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24,637건

▶ 전월(1,426,780건) 대비 7.2% 감소,

▶ 전년 동월(1,122,160건) 대비 18.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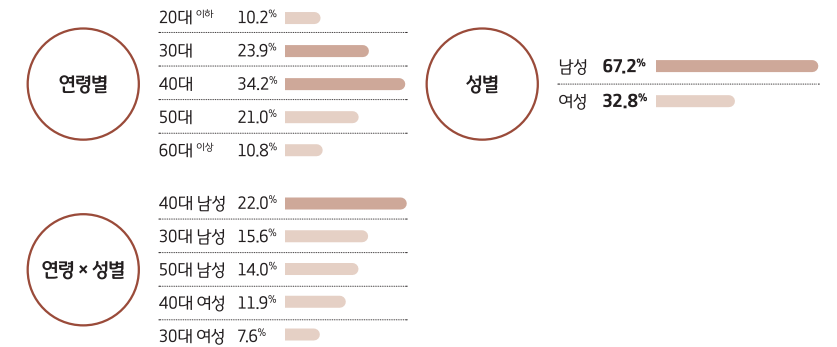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10.4. 10시)



2 신청인 현황



- ▶ 연령별로는 40대(34.2%) 및 30대(23.9%), 성별로는 남성(67.2%)이 다수를 차지
-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2.0%), 30대 남성(15.6%), 50대 남성(14.0%) 등의 순
-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74,623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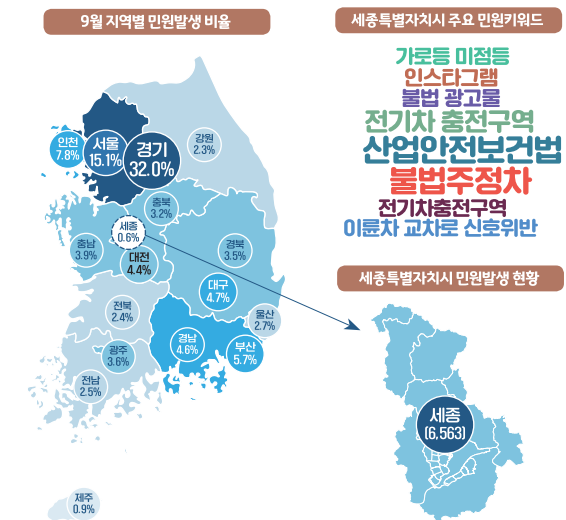


3 지역별 현황



-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0%(369,118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1%(173,939건), 인천 7.8%(89,928건), 부산 5.7%(66,272건), 대구 4.7%(54,617건)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4.9% 차지
-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8.3%↑).

*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신고, 이륜차 교차로 신호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불법행위 신고



※ 신청지역이 확인된 1,152,74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4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4.8%)**가 가장 많고, 도로(6.9%), 행정안전(5.8%), 환경(4.0%), 주택건축(3.0%), 과학기술(2.2%)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과학기술	경찰·검찰·법원	산업·통상	
64.8%	6.9%	5.8%	4.0%	3.0%	2.2%	1.9%	1.7%	
보건	문화	수자원	교육	방송통신	농림축산	재정	노동	
1.3%	1.1%	1.0%	0.9%	0.7%	0.7%	0.6%	0.6%	
국방	관광	체육	복지	도시	세무	해양수산	우정	외무·통일
0.5%	0.4%	0.4%	0.4%	0.4%	0.3%	0.3%	0.2%	0.2%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 과학기술 21.5% ▲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개최 및 가결 요구 등 과학기술 분야 증가
감소 도시 37.2% ▼	행정·안전 35.3% ▼
외무·통일 26.3% ▼	교육 22.8% ▼
산업·통상 21.2% ▼	

5 주요 민원키워드



9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위례신사선 조속한 착공, 염리5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아파트 사전점검 재 실시 요구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일반>

순위	키워드
1	영통소각장 폐쇄
2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해결 요구
3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 철회
4	△△공사구역 용도변경 요구
5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6	생활영속박시설 용도변경 기한연장
7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8	아파트 사전점검 재 실시 요구
9	아파트 사고 대책 조속 마련 요구
10	동물학대 적극 수사 요구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2	어린이 보호구역
3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4	제2경인선 추진
5	○○지구 버스노선 변경 반대
6	서울5호선 연장노선
7	영흥수목원 버스신설 요구
8	◇◇지구 회전교차로 복구
9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10	GTX-C 갈매역 정차 요구

중앙행정기관

9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89,049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순이며 감소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경찰청	151,713	153,630	1.3%
국토부	49,134	40,457	-17.7%
기재부	52,889	26,295	-50.30%
대검찰청	8,247	8,377	1.6%
고용부	8,707	7,601	-12.7%
국민권익위	5,069	6,201	22.3%
국방부	7,149	6,063	-15.2%
식약처	5,069	4,302	-12.8%
행안부	3,053	2,972	-2.7%
복지부	2,724	2,580	-5.3%
과기정통부	2,598	2,477	-4.7%
교육부	2,725	2,356	-13.5%
환경부	3,434	2,333	-32.1%
법무부	2,104	2,092	-0.6%
국세청	2,352	2,018	-14.2%

<증가율 상위 10개 기관>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저출산위	5	124	2380.0%
법제처	196	917	367.9%
건축정책위	76	113	48.7%
공수처	1,051	1,557	48.1%
총리비서실	197	255	29.4%
국민권익위	5,069	6,201	22.3%
중기부	187	223	19.3%
국조실	192	222	15.6%
대검찰청	8,247	8,377	1.6%
경찰청	151,713	153,630	1.3%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OX OMR 퀴즈

각 번호 OX OMR을 체크해서
「국민권익」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정답자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OX OMR 퀴즈로 권익 정보도 알고 상품도 얻어보세요.



#1 Q.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O	☐
X	☐

A. 네. 누구든지 부패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Q.
집 주변의 공장에서 산업폐기
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부인도
아닌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O	☐
X	☐

A. 네. 내부인 해당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
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Q.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때도
부패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O	☐
X	☐

A. 아닙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는 부패행
위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
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직자
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소홀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Q.
사기업의 채용절차법
위반 채용비리도
신고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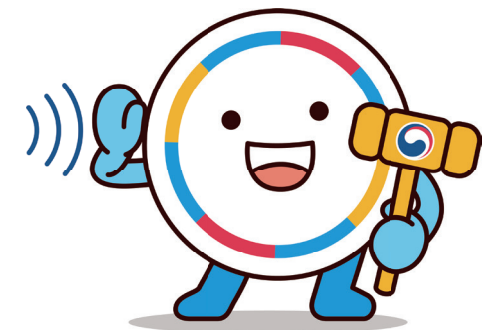
O	☐
X	☐

A. 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이 채용절차법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되는 채용비리 행위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Q.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나열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신고할 수 있나요?

O	☐
X	☐

A. 아닙니다. 단순 의무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
는 행위를 말합니다.



9월의 관심키워드: 지역축제



코로나19 이후 지자체에서는 다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가을을 맞아 예년보다 많은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문제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른 지역축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1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20.9월~'23.8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지역축제 관련 민원은 총 236,819건(월 평균 19,734건)이다.

2 신청인·신청지역

▶ 신청인은 남성(58.8%)이 여성(41.2%)보다 많고, 연령별로 50대(30.4%), 40대(24.0%), 60대(21.5%), 30대(17.0%) 순으로 나타났다.

▶ 신청지역은 경기 수원시(13.1%), 서울 강남구(11.4%), 경기 고양시(7.1%), 경기 성남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처리기관

▶ 기관유형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11.1%), 행정안전부(9.6%) 순으로 나타났다.

4 개선 요청사항

가. 지역 축제 안전

현재	(교통 혼잡 관련 대응 미흡) 행사 현장 주변의 교통 혼잡·불법주정차·교통 무질서 발생 (날씨 대비 대응 미흡) 악천후에 대한 대응 부재로 관람객의 안전 우려 발생 (시설 점검 미흡) 안전·놀이시설 점검 미흡으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안내 표지판 부재) 행사 현장 내 안내 표지판이 없어 관람객의 이동 및 통행 불편으로 혼잡 상황 발생 (안전 요원 및 관리 부족) 안전 요원 부족 및 불균형 배치, 신속한 대응 부재
개선 방향	(안전관리 의무화)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 교통·날씨에 대한 대비 계획 수립 - 안전분야 전문가의 사전 점검 및 행사 진행 참여 - 주요 지점 안내판 설치 -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배치계획 수립 ※ 각 지자체 별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규정」 마련

5 민원 사례

나.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현재	일부 지역 축제에서 숙박·음식 요금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바가지 요금을 부과
개선 방향	(요금 사전 신고제 실시) 행사 전 지역 주민, 상인들과 간담회 등을 마련해 가격 사전 공개 및 이용요금 사전 신고 실시 의무화

가. 지역 축제 안전

교통 혼잡 관련 대응 미흡	불법·주정차들이 너무 많아 교통의 불편함이 크고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축제 이전부터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벚꽃을 구경하고 즐기는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처도 없고 교통정리도 없는 이 상황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만 열심히 하고 관리를 안하면 나머지 불편 사항은 주민들이 다 감수해야 하나요?제발 단속과 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23.4.3.)
날씨 대비 대응 미흡	행사에 폭우예보로 인해 일주일 동안 참여자들의 문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천 시 우비를 제공하겠다는 외에 그 어떤 공지도, 대처도 없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천 시 추가 안전요원 증설도 없고 참여자들의 저체온증 방지를 위해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혹은 공간 개설 등과 같은 방안도 일절 없을뿐더러 주최측에 문의해도 답변을 피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23.5.26.)
안전·놀이 시설 점검 미흡	한 축제 현장의 대형 LPG통에서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에서 가스통 주위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화기 사용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등의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3.6.7.)
안내 표지판 부재	관광객의 이동 방향 표지판 부재로 막다른 골목으로 유입되는 인파와 길이 막힌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인파가 한곳에서 쪼여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객의 통행구역과 관람구역의 안내가 없어 관람객은 통행로에서 서서 관람하고, 골목으로 진입하는 관광객의 인원은 증가하며 나가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 발생했어요 ('23.5.30).

나.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축제 기간 숙박시설 요금 인상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알아보던 중 모텔 1박 숙박비가 19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주말로 설정해서 보니 평소 주말 숙박 요금은 9만 원이었습니다. 과도한 숙박시설 요금 인상에 대해 신고하고 이후 대응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3.5.26).
불합리한 음식 가격	해마다 축제를 가는 편입니다. 이번 축제 때도 일출제기간중 일했습니다 매년 축제 때마다 느끼지만 축제 때마다 음식가격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기분 좋게 축제에 갔다가 기분이 상합니다. 닭뿔집 2만원, 낙지볶음 3만원, 통돼지구이 5만원, 해물 파전 2만원 등. 그렇다고 양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음식으로 장난치니 가고 싶지 않습니다. ('23.6.12.) 축제를 수년간 다녀본 시민으로서 매년 행사장 내 음식판매점들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떡소떡과 핫도그가 1개에 5천 원이더군요. 너무 바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도 축제를 하게 된다면 바가지요금 잘 단속해주세요 ('23.6.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30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우선,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다만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광권 등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상품권을 추가하였다.

주요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주요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는 공공기관 퇴직자의 전관특혜 등 공공·민간 접점 부패,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발굴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업체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에 의해 나랏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신고기간 운영,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처분 이행 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비리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주택 부실시공 사태로 불거진 퇴직공직자 전관특혜 의혹 등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해 8월 10일부터 공공주택사업 부패·공익침해 신고 접수처를 신설하고, 10월 8일까지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66억 원 늘어난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 부패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모든 지방의회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편의 중심으로 행정심판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

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번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컨설팅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세 번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하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에서 85개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추석맞이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4일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산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법인, 소상공인,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법인 등 지원사업 홍보 강화, 지역특산주의 원재료 수급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 농식품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정부차원의 선제적 수급조절 등 다양한 고충과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현장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은 최대한 현장에서 처리하되,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통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8월 31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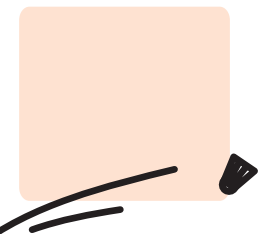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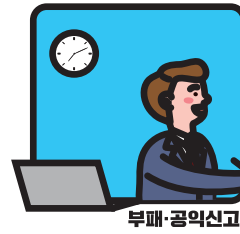
일반국민 2,324명과 국민패널 2,100명 총 4,424명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된 결과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 중 3,486명(78.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 중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그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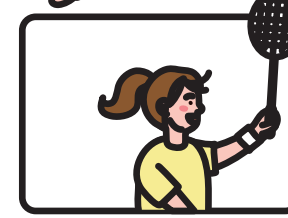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행정심판 통합에 대해 찬성은 78.8%, 반대는 6.6%,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는 1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67.7%),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가 우려(30.7%) 등이 제시됐다.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심판 절차 이용 간편(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37.2%),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12.2%)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심판 발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42.8%),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20.7%),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17.3%)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부합하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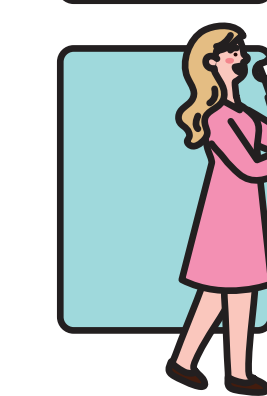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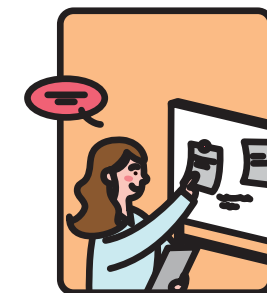
12월 9일은 공익신고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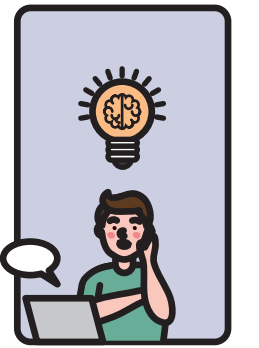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인터넷 신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 1398

놓치기 쉬운 국민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칫 놓치기 쉬운 작고 사소한 문제와 잊히기 쉬운 권리를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며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국민들의 권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충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수도 요금을 체납했더라도 소중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도 요금을 3~4개월 체납하여 스티커 형태의 수도물 공급 중지 예고장을 신청인의 거주지 우편함 전면에 붙이고 갔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예고장에 적힌 신청인의 체납정보를 보고 신청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은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스티커 제거가 쉽지 않아 연체료 외에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발생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하수도 요금체납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납부독촉장을 신청인의 우편함에 넣어두고 예고장 스티커를 신청인의 우편함 전면에 부착하였다. 스티커에는 아파트 동호수가 포함된 신청인의 주소, 체납개월, 체납금액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그 정보를 보고 이웃 주민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편함에 부착된 이 예고장 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스티커가 쉽게 제거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체료 외에도 또 다

른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신청인은 이중처벌을 받는 것처럼 느꼈다. 이에 신청인은 수도요금 체납금액이 적힌 이 민원 정수예고 스티커를 우편함 전면에 부착하는 것은 신청인의 개인적인 재무상태를 이웃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는 너무 가혹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된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수도 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누리소통망(SNS),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청인이 1975년경 매매로 취득한 미등기 상태의 토지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면서 2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때 분할된 토지 중 하나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되면서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되었고, 원래의 토지는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토지 역시 자신의 소유로 등기를 생성하였다. 이후 시간이 흘러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환지된 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며 토

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지적 소관 지자체에 소유자 정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래전 완료되어 소유자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정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청인은 지난 1975년,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후 1978년 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이렇게 분할된 2개의 토지 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되었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신청인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때 신청인은 당시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지적 소관 지자체에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다섯 가지 사실을 확인하여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째,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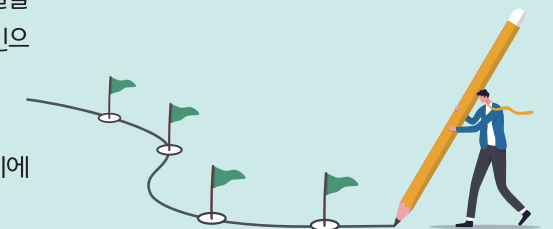
둘째,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셋째, 신청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이후부터 현재까지 ㄷ토지를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넷째,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했으므로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을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신청인이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의 기재사항 오류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신청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전통시장 화재위험 걱정하지 마세요!

사각지대 없앤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254건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에 달한다. 화재 발생 요인은 다양한데 특히 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적 요인으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통시장 발생 화재 57건 중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47.4%(27건)에 달했다.

한편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전기안전점검 때마다 전통시장의 점포 중 상당수가 점검에서 누락되거나(10%), 점검 누락 점포에 대한 2차 점검 절차의 부재, 화재 위험 점포(E등급)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전기설비의 안전등급기준에서 가장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매년 실시되는 전기안전점검 때마다 E등급을 받는 화재 위험 점포가 전체의 2~3%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 개보수해야 하는 E등급 점포들의 위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그 비율은 2021년 36.6%, 2022년에는 49.9%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2019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 시행이 가장 필요한 E등급 점포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장 단위로만 대상을 평가하고 선정해 오히려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화재 위험 점포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지자체 역시 화재 위험 점포의 즉시 개보수를 위해 개선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기안전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전기안전점검 결과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41.7%에 달하는 770개의 점포는 화재 위험 점포임에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후 전기안전점검에서 E등급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화재 위험 요소가 개선되지 않는 등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져 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1차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점포에 대한 2차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 확인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개선명령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개정을 통해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수처분 취소 청구

그림. 디자인에스





ChatGPT 이후 새로운 세상 세종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수진 교수

대화형 인공지능, 쉽게 말해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ChatGPT가 11월이 되면 한 살이 된다. ChatGPT 이전에도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은 있었지만, ChatGPT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전의 인공지능은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며 하나의 유행처럼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다. 그러나 ChatGPT나 Bard, Bing Chat, HyperCLOVA X 등의 생성형 AI는 인간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문화예술 같은 창작의 영역부터 산업에까지 두루 활용되고 있다. 분명 ChatGPT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연 것이 분명하다.

글: 양샘



◆ AI,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지금처럼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활용한 창작이 활발해지기 훨씬 전인 2018년, 인사동의 한 전시장에서 ‘인공지능 AI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전시가 열렸다. 세종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재직 중인 이수진 교수가 Atelier라는 AI 도구를 붓으로 삼아 외젠느 앗제, 빈센트 반 고흐, 장 프랑수와 밀레의 작품과 자신의 사진을 재료로 작업한 것들을 선보인 자리였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하기에는 예술가들에게 미안한 면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작품을 소통했었고 미디어 아트라는 영역에서 연구 결과물을 작품으로 포장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 전시는 연구 결과물을 선보인 쇼케이스였고 작품이라고 하

기에는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수진 교수의 이력은 독특하다. 응용동물학과의 수정란이식 연구실에서 처음 AI(Artificial Insemination, 인공수정) 분야를 알게 되면서 미세 이미지 세계를 탐구하게 되었다. 졸업 후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사진 전공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말과 글이 소통의 매개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새로운 소통 수단이 생긴 것이다. 이후 서강대학교 미디어공학과 비전 그래픽스 연구실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변형 알고리즘 개발과 연구로 공학석사 및 박사과정의 길을 걷게 된다.

“석사를 마칠 무렵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기여서 컴퓨팅이라는 기술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미지로 정확히 표현하면 시각 이미지로 대상을 표상화한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소통의 수단으로 이미지를 택한 저에게 이미지는, 언어나 문자보다는 다루기 편하죠. 말이나 글은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이해시키고 이해받는 것이 훨씬 편했으니까요.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해 지금은 딥러닝으로 새로운 이미지 생성과 응용을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도메인으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XAI(explainable AI)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미지 도메인을 연구하게 된 키워드는 소통 즉,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술과 기술,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다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술을 AI 연구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AI를 작업 도구의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은 기계가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어떻게’는 인간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죠. 현재 나와 있는 생성 알고리즘과는 주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주제는 ‘언제나 인간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갖게 해준다’에 있지만, 저는 이미지 생성의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개입 즉,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 개발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는 AI는 결국 도구다. 그렇기에 창작의 영역에까지 생성형 AI가 확장되면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에 대해 그는 반문한다.

“사진이 처음 발명되고 비디오 영사기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도 위기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느 문헌을 봐도 예술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술인가 아닌가란 논쟁거리를 주었다는 점을 상기해야죠.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가 사진이나 그림처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물감이나 사진기로 찍는 작품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예술 작품 세계를 좀 험겁게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공통점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선한 면들을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슬픔과 기쁨, 그 상반된 감정에도 우리는 눈물이라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가진 인간이 저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공감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예술은 인간이 더욱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대별, 시기별로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창의성이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만이 가능한 창의성, 그리고 아름다움이 기술과 예술로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앞으로 생성형 AI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창작은 인간의 영역이다. 기계(AI를 포함한)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은 영혼이 있지 않고 그것을 설명할 주체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수진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이용하면 반드시 표기를 하고, 작품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AI를
작업 도구의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수려해서 가을에 더 아름다운 충남 부여

삼천궁녀의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낙화암, 백제에서 가장 큰 강이라는 의미로 불렸지만 이제는 한적한 백마강, 서동요의 전설을 나긋이 읊어주는 듯한 궁남지 등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부여.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는 백제의 영광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 수려했던 과거를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을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다.

글. 나덕한 사진. 이용기

백제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유려한 정원, 궁남지

부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 유려하고 섬세한 백제를 대표하는 곳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궁남지. 백제 사비시대의 궁원지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인공 연못인 이곳은 천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핀 연꽃의 향연과 궁남지를 애써 보호하려는 듯 휘감는 버드나무 숲의 절경은 한 폭의 수채화라고 표현하기가 미안할 정도다. 과거에는 3만 평이었던 드넓은 공간이 1만 평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 아름다움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자리하고 있다. 궁남지가 부여시대 백제를 대표하는 것은 비단 ‘예쁘기만’ 해서가 아니다.

선화공주에게 반한 서동이 ‘서동요’를 지어 불러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백제의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무왕이 된 서동이 꿈꾼 백제부흥이 궁남지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창덕궁 후원이 왕과 왕비의 공간이었다면 궁남지는 아름다운 연꽃과 버드나무 숲,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인공 연못이 한데 어우러진 ‘백제의 정원’이었고 나아가 땅이 아닌 문화를 넓히는 원대한 꿈을 가진 공간이었다.

연못 한 가운데 용을 품었다는 포룡정과 연꽃단지 곳곳에 추억여린 원두막이 놓여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야생화와 수생 식물로 아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해마다 여름이면 궁남지에서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의 다양한 연꽃으로 물든 ‘서동연꽃 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





나라와 함께 백마강에 몸을 던진 설화 속 그곳, 낙화암

부소산성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삼천궁녀가 뛰어들었다는 낙화암을 만날 수 있다. 백제의 궁녀와 여인들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침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부소산성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이내 적들이 이곳까지 몰려들자 그들에게 사로잡혀 굴욕을 당하느니 치마를 뒤집어쓰고 백마강에 몸을 던진 것으로 유명하다. 백마강은 백제의 가장 큰 강이라는 뜻이다. 『삼국유사』에는 부여성 북쪽 모퉁이 큰 바위에 올라 몸을 던져 순절했다고 해 타사암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모습을 꽃이 떨어지는 모습에 비유하며 낙화암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낙화암 절벽에는 우암 송시열이 직접 쓴 ‘낙화암(落花岩)’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숲에 가려져 있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낙화암을 보기 위해서는 부소산성을 지나 걸어가는 방법과 유람선 또는 황포돛대를 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글을 자세히 보려면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다.



부소산성에는 걸어서 올라 돌아올 때 유람선을 타는 것을 추천한다. 돌아오는 길에 낙화암이라는 글씨가 더 선명히 보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절벽이 마치 그림 병풍과 같아서 백제의 왕이 놀고 잔치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 지금도 대왕포라고 부를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

절벽 아래에는 백마강과 맞닿은 곳에 조용하고 단아한 고란사란 사찰이 있다. 낙화암에서 떨어지면서까지 절개를 지킨 삼천궁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사찰 뒤쪽 바위에서 자라는 고란초에서 유래해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사실 고란사가 알려지게 된 것은 삼천궁녀 때문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약수터 주변에서만 특별한 풀이 자랐는데 고란초라 불린 이 풀의 효험 때문인지 고란약수를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고 전한다.

고란사 아래 백마강을 따라 구드래선착장까지 운행하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정해진 운행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 인원만 모이면 수시로 배가 출발한다. 또 백마강을 일주하는 황포돛대는 30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출발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탈지 못할 수도 있다.

부소산 남쪽에는 ‘S’자로 휘감은 중심에 사진 스폿이 있

다. 야트막하지만 사비성 외곽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흥산성에 400년 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하트를 절반으로 자른 듯한 모양으로 사랑나무로 불린다. 특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간에는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찍어 사진을 붙이면 하트모양의 나무가 돼 연인들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다.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등장한 이곳에서 화창한 날에는 논산, 강경, 익산, 서천 일대의 경관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재현한,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 왕궁과 사찰, 백성들의 생활공간인 생활문화마을 등 백제의 대표 건축양식을 재현한 공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 문을 열었다. 사비궁, 능사, 고분공원, 위례성, 생활문화마을로 크게 구성된 이곳은 199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7년에 걸쳐 완성한 백제의 문화유산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섬세한 건축양식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의 역사공부로도 또 고궁을 둘러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 왕실의 사찰인 능사에는 대웅전과 오층목탑을 포함해 향로각, 부용각, 결업각, 자효당, 숙세각 등 부속 전각까지 고스란히 복원되어 있다.

그중 시선을 끄는 건 오층목탑이다. 높이 38m에 이르는 이 거대한 탑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원한 백제시대 목탑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곳이다. 이곳에서 국보 288호인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이 출토되기도 했다. 불전에 향을 피우기 위해 사용했던 백제금동대향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 유물 100선'에 선정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비궁에는 하례식, 외국사신 접견 등 왕실의 주요행사에만 사용한 웅장하고 화려한 천장을 볼만하다. 궁궐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1,400년 전 백제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사비궁 뒤편에는 귀족과 서민들의 가옥을 재현한 생활문화마을에서는 자기체험, 한지공예체험, 목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마을 뒤편으로는 위례성도 볼 수 있는데, 백제 건국 초기의 도성을 재현했다.

이외에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설전시실을 비롯하여 기획전시실, 금동대향로극장, 백제 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은은한 달빛과 조명 아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넓디넓은 백제문화단지를 전부 둘러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금세 지칠 수도 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비로열차, 전기여차와 전기 인력거로 시원하게 백제문화단지 곳곳을 다닐 수 있으니.

기업의 경영 목표가 바뀐다 ESG경영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경영은 강화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ESG경영을 표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기후변화와 기업 경영 목표의 변화다. 과연 ESG경영이 향후 기업의 미래를 변화하게 할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글. 유현경 도움말 LG경제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



2023년을 수놓은 화두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다. 과거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인 분석자료로 평가받았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정량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ESG 전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 바로 CSR이다. CSR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ESG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CSR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 환원 활동인 반면,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경영을 별도의 과정이 아닌 아이덴티티로 가진다는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정보도 공시되고 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기업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내년부터 유럽에 있는 기업 5만 개 이상을 대상으로 ESG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도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발표하면서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SG는 투자 기준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ING, 프랑스의 BNP파리바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지속가능연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주요 은행도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 전체 기금의 50%를 ESG 기반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구매

소비자 또한 소비 판단의 기준이 가격에서 환경·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스타벅스의 'Bean to Cup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는 커피 농장에서 아동 노동,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자 모바일 웹에서 바코드 스캔을 통해 원두의 생산 및 유통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객들은 구매한 커피가 인권 문제가 없는 커피농장에서 생산됐는지 쉽게 파악하고 이를 판단해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

ESG가 갑자기 급부상한 단어는 아니다. ESG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UN이 주도한 2004년 글로벌 금융기관 참여 워킹그룹 보고서에서 발간한 “먼저 고려하는 자가 이긴다(Who cares wins 2004)”였다. 이후 2006년 제정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ESG를 구성하는 요소가 제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 및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1년 5월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기업의 ESG 경영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3%,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였다. ESG 우수 기업 제품에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88%에 달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제품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ESG를 활용하는 기업

그렇다면 현재 ESG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ESG를 활용하고 있을까? 먼저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8년 6월 이후로 줄곧 AAA 등급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ESG경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 뽑힌 MS는 탄소중립을 이미 2012년에 달성했으며, 더 나아가 탄소 흡수량이 탄소 배출량보다 높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MS는 ‘AI for Good’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 문제 해결, 전 세계 공중보건 개선,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아동보호 및 인권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MS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도 ESG경영의 우수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기업 중 하나다.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에서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파타고니아는 탄소와 각종 자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1년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소비를 지양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파타고니아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 유기농 원료와 친환경, 공정무역 제품 등을 재료로 활용해 환경오염이나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생산 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한 매년 매출의 1%를 ‘지구 에 내는 세금’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 무턱대고 활용해서는 곤란한 ESG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ESG 역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ESG 워싱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ESG 워싱이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ESG 워싱’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과 규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SC존슨’은 자신들의 제품에 그린 리스트를 표시했다가 소비자단체가 ‘제3자에 의해 녹색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바 있으며, 문라이트 슬럼버 역시 출시한 유아용 매트리스 제품을 유기농으로 표시했다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며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CSR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 등으로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엑슨 모빌’의 경우 기후변화 규제가 사업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계산한 수치를 발표했으나, 그 수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제 기업의 경영은 이익의 극대화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근본적인 변화가 ESG경영이며 이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업의 목표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열 달 동안 Mom 편한 날을 위한 실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이제는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익숙하게 되어 버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대출산율은 0.78명으로 해마다 이 숫자는 줄어든다.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에는 임산부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된다.

매년 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눈여겨보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보자.
우리는 모두 엄마 배에서 자라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 최소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모이고 쌓이면 조금 더 행복하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17가지 제안

1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2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3

난임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4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 소급 적용

5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6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7

건강보험 급여 회차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

8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9

산전검사를 위한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10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항목 추가

11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바우처' 지급

12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에 대한 연구 추진

13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치를 위한 '복지로' 개편

14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15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

16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여부 확인

17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응대 역량 향상

당신의 심장은 안녕한가요? 심혈관질환을 지켜줄 튼튼한 습관

겨울철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가 심혈관질환이다.

하지만 환절기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은 겨울과 환절기는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여성, 동맥경화 환자는 좁은 혈관이 작은 기온 변화에도

쉽게 터지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심혈관질환은 왜 발생하며,

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글. 이상민 의학전문기자 도움말. 정진규 충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심혈관질환의 원인

평소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목숨을 앗아가는 심혈관질환. 전 세계 사망원인 가운데 심혈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뇌혈관질환이다. 갑작스럽게 일교차가 크거나 급격히 추워지면 혈압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온도 차가 10도 이상인 환절기가 되면 심혈관질환 환자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일교차가 1도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은 0.7~0.9% 증가하는데 자율신경계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에 무리를 주어 심혈관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심혈관질환이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심장은 펌프처럼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맥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혈류량을 공급받지 못하면 노폐물이 축적되고 저산소증에 처하게 된다. 이때 생기는 심장기능의 장애를 심혈관질환이라 부른다.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이 심혈관질환에 해당된다.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심장을 위해선 심장동맥이 튼튼해야 한다. 또 심장동맥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우선인데,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질환은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혈관, 근육세포도 노화해 탄력을 잃고 일교차나 미세먼지에 의한 공격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정보

심혈관질환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4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해 심혈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족력 등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심장 건강의 3대 수칙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심장 건강의 3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심장질환은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적당한 체중관리도 필요하다. 과도한 비만은 몸속에 지방을 축적하고 혈중 인슐린 농도와 혈중중성지방을 높여 혈압과 혈당 상승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이로 인해 좁아진 혈관은 심한 경우에는 혈전에 의한 심장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체중을 유지하고 과식, 폭식하지 않는 것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첫 단추다. 적게 먹고, 채소를 중심으로 저염식을 하는 식이요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일과 곡류, 야채 등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나 섬유

유소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적절한 운동도 필요한데 이때는 준비운동을 반드시 갖고, 1회 30분 이상, 주 3일 이상 수영, 자전거, 걷기, 러닝,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 매일 1만 보를 걸으면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2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금연도 필수다. 흡연은 폐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흡연과 심장병의 위험도는 비례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50세 이하에서 그 위험도가 더 높은 편이다. 흡연량이 많다면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치명적인 부정맥의 위험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흡연은 그 자체로 혈액의 점도를 높임으로써, 혈전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이미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혹은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 경화증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큰 일교차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춥지 않다고 무리하게 새벽이나 야간에 운동하는 것을 피하고,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어 온도변화에 대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정보

심장 발작 위험도는 금연 이후 보통 1~2주 이후부터 줄어들며, 비흡연자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가는데는 약 1~2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금연은 각종 심장 질환 위험 요인들을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심장질환 예방차원에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에 금연하는 것이 좋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심장근육은 끊임없이 수축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다량의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 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단절되면 그 부분의 심장 수축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십 분 이내에 심장근육 세포는 죽게 된다. 만약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심근경색 발병 후 한 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심장근육의 손상이 크면 심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정보

고혈압이나 심부전 등 심장 및 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할 때는 바나나, 오렌지, 매실, 녹황색 채소 등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들 약이 우리 몸의 칼륨 농도를 높인데, 바나나나 녹황색 채소 등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다면 자몽주스를 피해야 한다. 자몽주스가 체내 약물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DHA가 풍부해 심혈관에 도움을 주는 연어

100g당 161kcal로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한 연어는 영양소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다. 연어에는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오메가3가 많아 혈액 속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큰 효능을 발휘한다.

또 연어의 붉은 빛을 만드는 천연 색소 아스타크산틴에는 비타민 B1, B2, D가 가득해 항산화 작용을 도와 몸의 활성산소 작용을 줄여주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고 눈의 피로개선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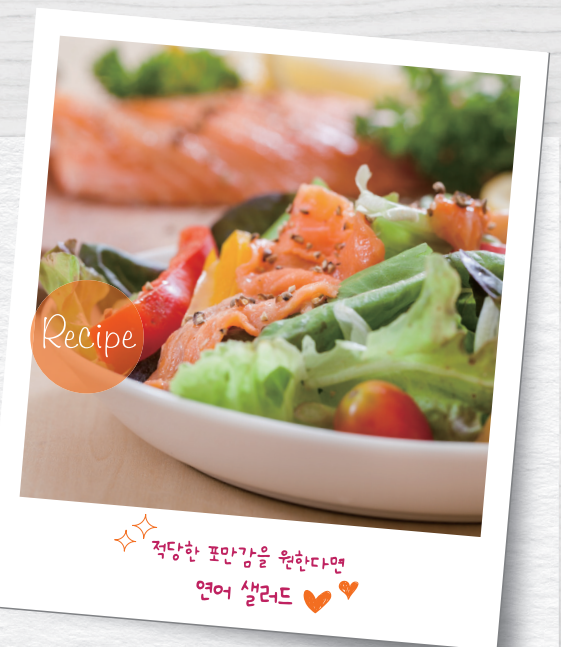
신선한 연어를 구입하려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색이 선명하고 살이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 속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항염증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연어를 구울 때는 오메가6 지방산이 적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활용해 약불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연어는 하루에 100g, 성인 손바닥 정도 크기의 한 조각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재료

연어, 양상추, 로메인, 비타민,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메추리알, 체더치즈, 파슬리가루

만드는 법

- ① 연어에 소금과 후춧가루로 살짝 간을 한 후 겉면만 익힌다.
- ② 양상추, 피망, 파프리카 등의 채소를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좋게 썬다.
- ③ 연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 ④ 기호에 맞게 아보카도, 식빵 등의 재료를 곁들이고 발사믹, 타르타르, 겨자 등 원하는 소스를 뿌려서 먹는다.



✧ 적당한 포만감을 원한다면
연어 샐러드 ♥♥

독자의 소리

2023년 <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지난 호를 읽고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해 시행기준과 사례, 국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옥(대전광역시 동구)



국민들의 제안이 현실 정책에 반영되어 일선행정에서 실현되니 너무 기쁩니다. 좋은 제안이 있다면 꼭 개선되도록 저의 의견을 제안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수정(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은 사례는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기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강서영(부산광역시 사하구)

퀴즈 | Quiz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OX OMR 퀴즈!
엽서에 OX OMR 퀴즈 정답을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20~21P 참고)

- ※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퀴즈 정답자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

- 김세진(인천광역시 부평구)
- 김영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서문석(대전광역시 서구)
- 이재섭(서울특별시 중랑구)
- 이춘임(경기도 포천시)
- 조효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최영수(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난호 정답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6번	○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이메일



신규 정기구독 신청 □

ACRC NEWSLETTER 2023
국민권익 Vol. 78 AUTUMN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3 0 1 0 2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 권익위 열독왕 퀴즈 (OX OMR)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20~21P를 참고해 주세요!
1.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O X)	2. 집 주변의 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부인도 아닌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O X)	3.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때도 부패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O X)
4. 사기업의 채용절차법 위반 채용비리도 신고할 수 있나요?? (O X)	5.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나열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신고할 수 있나요? (O X)	

11월 28일

엑스포 유치는 우리의 숙명!
이제 마지막 승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대한민국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칠 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산 앞바다에
감격의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 2023.4.2~7 BIE 평가단 방문
(인프라 및 유치열기 등 평가)
- 2023.6.20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 2023.10.9 국제 심포지엄(파리)
- 2023.11.28 개회국 선정 투표
(182개 회원국 비밀투표)
- 11월 28일은 엑스포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원하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마지막 결전의 날까지 함께 응원해주십시오.



엑스포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You will hear the news of EXPO victory report.

